



유럽 정상회의, 유럽 위기 해결 방안 수립 난항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12월 9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 불량 운영국에 대한 제재 강화, 재정통합을 위한 조약 개정, 유로본드 발행, 구제금융기금 확충, 유럽중앙은행(ECB) 역할 변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어느 한 가지도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.
 -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유일한 성과물이 재정 불량국에 대한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유로존 별도 조약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함.
 - 유럽중앙은행(ECB) 역할강화,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 및 국제통화기금(IMF) 재원 확충 등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방안들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임.

-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제안한 EU ‘안정 및 성장’협약 개정안 논의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임.
 - 개정안의 골자는 GDP 대비 3% 이하 재정적자 기준에 대해 위반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임.
 - 그러나 EU 차원의 개정안 합의는 불투명함.
 - 독일 정부 관리는 12월 7일 EU 전체 합의 전망에 대해 지난주보다 비관적이라고 밝힘.
 - 영국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대가로 자국 금융산업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통제권 중 일부 권한을 되찾으려 함.
 -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 27개국 전체에 대한 조약을 선호하지만 유로존 17개국이 조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유로존 별도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힘.

-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협약 개정안은 독일 정부가 그간 언급해 온 재정통합 구상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안으로 재정통합과 큰 차이를 보임.

- 동 협약 개정안에는 유럽사법재판소(ECJ)가 제재를 가하고, EU가 각 회원국 예산안에 거부권을 갖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.
- 그 결과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강제력 있는 제재를 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동 개정안은 재정적자 억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근본적 조치이고, 장기적으로 재정통합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있음.
- 개정 협약 시행에도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당장 3% 이하로 떨어질지도 의문임.
 - 독일(2.3%, 국제통화기금 2011년 전망치 기준)을 제외하고 대다수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적자 3%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.¹⁾

■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존 전체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경고 속에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 수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- 유로본드 발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.
 -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월 5일 유로본드 발행이 위기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데 독일과 프랑스 양국 모두 동의했다고 밝혀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임.
- ECB가 위험국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.
 - 사르코지 대통령이 ECB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, 독일과 프랑스는 ECB 역할 강화를 정부 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.
- 다만, 12월 8일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.25%p 인하하고 3년 만기 장기대출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지급준비율도 1%p 인하함.

■ 아울러,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 재원 확충과 함께 추진 중인 IMF 재원 확충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 못할 전망이다.

- 독일 정부는 IMF 재원 확충이 1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.
- 또한, 가용재원이 4,400억 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과 2012년 7월 약 5,000억 유로 규모로 출범하기로 계획된 유로안정화기구(ESM)²⁾의 동시운용 가능성도 일축함.
 - 이 방안은 유로존 위기 지원 시스템을 'EFSF + IMF'에서 'EFSF + ESM + IMF'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임.

(Wall Street Journal 12/8, 12/7)

1) 프랑스(6.0%), 이탈리아(4.3%), 스페인(6.2%), 그리스(7.4%), 포르투갈(5.6%), 아일랜드(10.2%).

2) 유로안정화기구(ESM) 설립의 근본적 목적은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을 대체하는 것임.